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5.9(금) ~ 2025.5.15(목)

제공일시 2025 5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5.9(금) ~ 2025.5.15(목)

제공일시 2025 5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美 공화당, 전기차 세액공제 조기 종료 추진... 배터리 업계에 파장

- 미국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세액공제를 조기 종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가 긴장하고 있음
-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공화당 의원들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에서 전기차 세액공제를 2027년에서 2026년 말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을 포함함
- 이번 법안에 따르면, 2026년 과세연도에 구매한 전기차 중 미국에서 2009년 말부터 2025년 말까지 20만대 이상 판매한 제조업체의 차량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이는 실질적으로 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인해 배터리 업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짐

[\(뉴스로드 2025.5.13\)](#)

2. 캐나다, 차세대 원전 'SMR' 잔결음... G7 최초 설립 착수

- 캐나다가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설립에 착수하면서 G7 국가 중 최초 상용화를 추진함
- 블룸버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SMR 4기 설립에 209억캐나다달러(약 21조원)를 투자하는 계획을 승인했다고 지난 8일 보도함. 완공되면 30만 가구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전망이다
- 이에 따라 온타리오파워제너레이션(OPG)은 캐나다 토론토 근방 달링턴 원자력 발전소에 GE버노바사가 설계한 SMR 'BWRX-300' 첫 기 설립에 착수함. 전기 출력량 규모는 기기 당 300MW임

[\(지디넷코리아 2025.5.11\)](#)

3. 英, 해상풍력 투자 인센티브 2배 이상 확대... 1GW당 500억원 초기 자금 지원

- 영국 정부가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청정산업 보너스(Clean Industry Bonus, CIB) 제도의 예산을 기존 2억파운드(약 3715억원)에서 5억4400만파운드(약 1조107억원)로 약 2.7배 확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각) 보도함
- 고금리, 자재비 급등,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 민간 개발사의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임
- 이번 예산 확대는 올해 말부터 진행 예정인 해상풍력 입찰부터 적용되며, 민간 개발사의 초기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임팩트온 2025.5.13\)](#)

국내 정책

1.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 정부가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을 지원해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움. 환경부는 14일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이번 방안은 △순환이용 시장 조성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 △기술혁신 및 경쟁력 강화 △전주기 관리기반 구축 등으로 구성됨
- 먼저, 순환이용 시장 조성을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함. 재활용 가능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내년부터 전 품목으로 확대해 폐제품 내 배터리의 회수율을 높임. 국내 재활용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터리 소재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기술 등을 개발함

[\(뉴스핌 2025.5.14\)](#)

2.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위한 3대 신규 정책 발표

- 중소벤처기업부가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스케일업' 신규 지원 정책을 발표함
-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과 13일 진행한 '2025년 초격차 스타트업 Renovation Day' 행사에서 새로운 스타트업 지원책으로 △초격차 링크업(LinkUp) △초격차 VC 멤버십 △초격차 IPO 프로그램(Tech-IPO Connect) 3가지를 소개함
- '초격차 IPO 프로그램(Tech-IPO Connect)'은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시리즈 B 이상)이면서 IPO를 추진 중인 스타트업 2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함
- 중소벤처기업 전문 IPO 증권사에서 RFP(제안 요청서) 작성부터 발표, 컨설팅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하게 됨

[\(산업일보 2025.5.13\)](#)

3. 환경부, 캄보디아 물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양국 물협력 본격 추진"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물사업 협력 사절단'이 캄보디아를 방문해 양국 물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
- 기존에 프랑스, 일본 등이 중심이었던 캄보디아 물관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옴
- 환경부는 지난 5~7일(현지시간) 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물 산업 협력 사절단을 캄보디아에 파견해 정부 간 협력(G2G)뿐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 물기업 간 협력(G2B) 체계를 구축했다고 8일 밝힘

[\(국민일보 2025.5.8\)](#)

글로벌 기업

1. 머스크·레고가 먼저 쓴다… 세계 첫 e-메탄올 공장 가동

- 덴마크 에너지 기업 유럽에너지(European Energy)와 일본 종합상사 미쓰이물산(Mitsui & Co.)은 13일(현지시각) 덴마크 남부 카쏘(Kassø)에서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의 상업용 e-메탄올 생산시설을 공식 개장했다고 밝힘
- 카쏘 e-메탄올 시설은 연간 4만2000톤(약 5300만 리터)의 e-메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상업용 플랜트임
- 생산된 연료는 해운사 머스크(A.P. Moller - Maersk), 장난감 제조사 레고(LEGO), 글로벌 제약사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에 공급됨

[\(임팩트온 2025.5.14\)](#)

2. 테슬라, 중국서 사이버캡·세미트럭 자동차 부품 조달 재개

- 테슬라는 미국과 중국의 관세 휴전으로 이달말부터 중국에서 사이버캡과 세미트럭용 자동차 부품을 운송받을 계획임. 14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이 사안에 관련된 소식통을 인용한데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달 중단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의 수입을 재개함
- 그러나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이유로 상황이 여전히 변할 수 있다고 덧붙임

[\(한국경제 2025.5.14\)](#)

3. 닛산, LFP 배터리 공장 계획 철회… 韓, 中 유일 대항마 부상

- 일본 닛산자동차가 자국인 규슈에 건설할 예정이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의 설립 계획을 전면 철회함. 가격뿐 아니라 품질에서도 앞서가는 중국 LFP 배터리와의 경쟁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짐
-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닛산은 규슈 후쿠오카현 기타규슈에 건설할 예정이던 전기차용 LFP 배터리 공장의 설립을 백지화한 데 이어 18년 만에 임원직 대상의 정리 해고를 검토하고 있음

[\(디지털타임스 2025.5.11\)](#)

4. CATL, 유럽 공략 위해 추가 IPO… K배터리 3사와 격차 더 벌어질 듯

- 세계 1위 배터리 회사인 중국 CATL이 홍콩 증시에 상장해 투자에 쓰일 7조원이 넘는 자금을 조달함. 캐즘(대중화 전 수요 정체)으로 시설 투자를 줄이고 있는 한국 배터리 3사와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1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CATL은 이날 홍콩 증권거래소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함. CATL은 주당 263홍콩달러(약 4만7000원)에 1억179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할 계획임. 조달 자금 규모는 311억6713만홍콩달러(약 5조6000억원)임

[\(한국경제 2025.5.12\)](#)

국내 기업

1. 두산에너지빌리티, 태국 GPSC와 암모니아 이어 차세대 원전 협력 확대

-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태국 국영 에너지기업 GPSC와의 협력을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분야까지 확대함
- 14일 업계에 따르면, GPSC의 수퓏 테차와라신사꾼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경영진이 최근 경남 창원에 위치한 두산에너지빌리티 본사를 방문함
- 암모니아 혼소·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현황을 점검하고 SMR 관련 협력 방안을 모색함
- GPSC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SMR의 △생산 공정 △시장 수요 △기술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탄소중립 솔루션 밸류체인 강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할 방침임

[\(더구루 2025.5.14\)](#)

2. '범현대家' 현대코퍼레이션, 신사업 박차... 獨업체와 첫 '재활용 JV' 설립

- '범현대가(家)'를 대표하는 종합상사인 현대코퍼레이션이 독일 태양광 재활용업체 플렉스레스와 태양광 중심 재활용 합작법인(JV)을 설립함.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친환경 신사업에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임
- 현대코퍼레이션은 조만간 태양광 재활용 사업에 관한 국내 실증을 거쳐 해외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임

[\(파이낸셜뉴스 2025.5.14\)](#)

3. DS단석, 日코스모오일社와 SAF 전처리 원료 납품

- DS단석은 일본 코스모오일(COSMO OIL)사가 오는 6월 가동하는 연산 3만톤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설비에 투입할 전처리 원료(UCO, CORSIA 인증) 관련으로 약 14억원 규모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힘
- 이번 계약 체결로 납품하는 SAF 전처리 원료는 초도 거래건으로, 해당 물량은 이달 하순 선적될 예정임. 이번 계약을 통해 DS단석은 오는 2027년까지 약 30조원 규모가 예상되는 글로벌 항공유시장의 사업 확대 발판을 마련함

[\(에너지신문 2025.5.13\)](#)

4. KMC해운-덴마크 에스박트, 합작법인 출범... 韓 해상풍력사업 협력

- 중견 해운업체인 KMC해운이 덴마크 해양 서비스 전문회사 에스박트(ESVAGT)와 해상풍력 시장에 진출함
- 13일 에스박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8일 KMC해운과 합작법인 'KESTO'를 설립해 한국 해상 풍력발전 시장을 공략할 교두보를 마련함
- 양사는 합작법인으로 한국 해상풍력 시장에 전문성을 발휘할 예정임

[\(더구루 2025.5.13\)](#)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5.9(금) ~ 2025.5.15(목)

제공일시 2025 5 2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원자력 기반 수소 '저탄소 연료' 인정 2028년까지 유예

- 유럽연합(EU)이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한 수소를 '저탄소 연료'로 공식 인정하는 결정을 2028년까지 유예하면서, 수소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려던 원자력 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 유럽연합위원회(EC)는 '저탄소 수소'에 대한 정의와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원자력 발전소와 전력 구매 계약(PPA)을 체결한 수소 생산 방식의 분류 여부는 2028년 7월까지 유보됨.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2026년 6월부터 시작될 예정임. 이는 원자력 기반 수소가 최소 3년 이상 '저탄소'로 인정받지 못한 채 정책적 공백 상태에 놓인다는 의미임

- 원자력 산업계는 강한 반발을 표명하고 있음. 유럽 원자력 산업 단체 뉴클리어 유럽(Nuclear Europe)의 에마뉘엘 브루탱 사무총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유예하는 것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 생산 방식에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제공한다"고 비판했음

- EU는 2023년부터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를 '그린 수소'로 인정해 시장 육성을 본격화한 반면, 원자력 기반 수소는 제도권 밖에 놓이면서 투자와 인프라 확대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EU 집행위 대변인은 "회원국에 적합한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며 "각 수소 생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 수립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 현재 유럽 내 산업용 수소는 대부분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생산되며, EU는 이를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로 점진적으로 대체하려 하고 있음. 로이터에 따르면, 이번 수소 생산 방식의 공식 인증 여부는 향후 인프라 투자, 기술 개발, 시장 확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초안은 원자력 에너지 활용을 둘러싼 EU 회원국 간 갈등을 다시 부각시켰음

-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등 친원전 국가들은 원자력을 에너지 전환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간주해 적극적인 인정을 요구해왔음. 반면, 독일, 덴마크, 스페인 등은 방사성 폐기물 등 환경 리스크를 이유로 원자력을 일부 녹색 정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임. 이들 국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중심의 전통적인 재생에너지 전략을 고수하고 있으며, 원자력 포함이 정책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와 재생에너지와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임

- EU 회원국 전문가들은 이번 초안을 오는 16일(현지시각)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임. EU 집행위 대변인은 "모든 회원국에 적합한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수소 생산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음. 특히, 수소 경제 전환의 관건이 되는 생산 방식 인증 문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기술 개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임

(임팩트온 2025.5.15)